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일 동맹

- 일시 : 2019.9.3(화) 오후2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중구 정동)
- 주최 :  바른사회,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연구소
- 후원 : 바른사회TV

본 토론회는 바른사회TV(유튜브방송)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순 서

■ 사 회

- 이 영 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 발 제

- 김 태 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前 통일연구원장)
- 신 범 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토 론

- 신 원 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 신 인 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 폐 회

■ 목 차 ■

■ 발 제

- 지소미아(GSOMIA)와 한미동맹 9
- 김 태 우 (前 통일연구원장)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 17
- 신 범 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토 론

- 신 원 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 29
- 신 인 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31

■ 정책토론회

발제

■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장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지소미아(GSOMIA)와 한미동맹

김 태 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前 통일연구원장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중국몽(中國夢)을 앞세우고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러시아와 결속하여 한국을 때리는 항미격남(抗美擊南)과 북핵을 두둔하는 항미원조(抗美援朝)를 계속하고 있고, 대일본주의(大日本主義)를 꿈꾸는 아베 정부는 ‘문재인 정부 길들이기’를 위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동맹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를 우회하여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거래를 원하면서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과 통북봉남(通北封南)을 하고 있다. 바야흐로, 한국의 안보가 오면초가(五面楚歌)의 누란지위(累卵之危)에 처해 있다.

지난 7월 23일 독도 상공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고립무원(孤立無援)에 처한 한국 안보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중·러의 군용기들이 공공연하게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유린했고, 이어서 러시아 조기경보기가 한국의 영공을 침범했다. 한국이 전투기를 발진시키자 일본이 “독도 상공은 일본의 영공”이라며 전투기들을 출격시키고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에 항의했다. 그 와중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줄기차게 계속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을 위협하지 않으므로 불쾌하지 않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 등의 언급을 했을 뿐이다. 미국 대통령이 2만8천여 명의 미군과 20여만 명의 미국인이 체류하는 동맹국 한국의 안위를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시위에 면죄부를 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8월 27일 유엔안보리 회의 후 독일·영국·프랑스 3국이 연이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할 때에도 미국은 동참하지 않았다.

한국이 안보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역할이 결정적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 동맹이 와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통북(通北)·친중(親中)·탈미(脫美)·반일(反日)’을 골자로 하는 좌파적 수정주의 기조를 고수함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동맹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런 중에 8월 22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파기’를 발표함으로써 한미동맹은 한번 더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후 미국이 한일 갈등에 있어서 중립을 유지했던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일본 편들기’에 나서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조기 전환까지 실행되면 동맹의 결속력이 치명적인 손상을 받아 동맹은 생사(生死)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기조를 고수하고 있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점화된 한일 갈등의 와중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했으며, 2017년 출범 이후 줄기차게 전작권의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동맹이 와해되고 있다

미국은 동맹을 평가할 때 통상 다섯 가지의 기준을 사용하는데, 이념적 상응성, 전략적 가치, 공동주적의 존재 여부,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에의 참전, 국방비용의 규모 등이 그것들이다. 한국은 이 5대 기준에 모두에서 이탈하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통북·친중·탈미·반일' 기조를 고수함에 따라 그리고 국내적으로 반시장적인 경제정책들을 강행함에 따라 한미 정부 간 이념적 상응성(ideological competency)은 희석되거나 사실상 상당 부분 소멸되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동맹을 맺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동맹관계를 맺는 등 예외들이 있었지만, 이 원칙은 대체로 유지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하고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지 않음에 따라, 한미가 함께 대처해야 할 공동주적도 소멸되고 있다. 1954년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으로 출발했고 지금도 군사동맹의 성격이 강하다. 공동주적이 소멸되면 동맹의 결속력도 약화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하는 일본과는 반대로 한국은 이 전략에 불참하면서 중국에게는 '3불(不)'을 약속해 주었다. 이를 통해 사드(THAAD) 추가배치 배제, 미 미사일방어 시스템(MD)과의 통합 배제, 한·미·일 안보동맹 배제 등을 약속해 주었으며, 성주 사드(THAAD) 기지의 정상 가동을 훼방하는 데모꾼들은 지금도 방치되고 있다. 미국이 보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일본에 비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국은 베트남 전쟁 이후 유의미한 규모의 전투부대를 파병하여 미국의 전쟁을 도운 적이 없으며, 이라크 등 중동에 파견한 한국군은 비전투 부대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함께 피흘리는 동맹'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미국이 보기에 한국이 지출하는 국방비용도 인상적이지 않다. 한국과 비슷한 안보위험국인 이스라엘의 국방비가 GDP의 5% 수준인 것과는 달리, 한국은 전쟁의 위험이 없는 서유럽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물론, 한미동맹의 이완에는 '트럼프 요인'도 작용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한미동맹의 위기는 한미 합작품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당선되었고 취임 직후부터 한국, 일본, 독일 등 동맹국들을 '무임승차국'으로 몰아 부쳤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동맹정책의 기조가 'On-Shore Balancing(적극적 개입)'에서 'Off-Shore Balancing(소극적 개입)'으로 바뀌면서 미국은 피를 흘리거나 돈을 써야 하는 개입을 자제하고 동맹국에게 가급적 많은 부담을 떠넘기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달라진 동맹정책 기조가 문재인 정부의 좌파적 수정주의와 합쳐지면서 한미동맹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안보문제로 확대된 한일 갈등

현재의 한일 갈등은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생산업체들에게 수출해온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리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 7월

4일부터 대한(對韓)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가시화되었다. 이어서 일본은 외국환 관리법상의 우대국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예정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대체 수입선을 찾느라 분주히 움직이면서 열심히 국산화 가능성을 가늠하고 있다. 이후에도 양국 간의 감정싸움은 견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 일본이 추가보복을 시사하는 중에 한국은 GSOMIA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준비에 착수했다. 결국, 한국은 8월 22일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했고, 8월 25~26일에는 이지스 구축함과 육군 특전사까지 동원된 확대된 규모의 ‘독도 영토수호 훈련’을 실시했다. 일본은 8월 28일부터 ‘화이트 리스트 한국배제’를 시행했다.

이렇듯 ‘확전의 사다다리(ladder of escalation)’를 타고 진행 중인 한일 갈등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부터 발화되었지만, 출발점은 2018년 11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이춘식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신일본제철(구 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보상 문제를 한국정부에게 이양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한국 정부에 의해 1975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뒤늦게 한국 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배상책임을 판결한 것은 국가 간 합의인 청구권 협정을 뒤집는 행동이었다. 이에 아베 정부가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지목하고 대응을 시사했지만, 이후 8개월 동안 한국 정부는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만을 내세운 채 손을 놓고 있었다. 그랬다가 막상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발표하자 정부와 방송언론들은 불매운동을 포함한 반일(反日) 캠페인을 주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강제징용 배상문제로 시작된 한일 갈등이 경제문제와 안보문제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중론자들이 ‘국익계산에 의거한 냉정한 대응’과 ‘지소미아 유지’를 주문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거의 언론을 타지 못했고, 한국 정부는 결국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했다.

동맹 파열을 촉발한 지소미아 파기

GSOMIA는 2016년 11월 23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간에 서명되었는데, 서명에 이르기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한일 간에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부터였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반복되면서 양국은 협정을 서둘렀으며, 한국정부는 2012년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일본과 체결할 GSOMIA의 문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현재의 여당)은 국민의 반일감정을 무시한 밀실 추진’이라는 이유로 정부를 질타했고, 이명박 정부는 서명을 무기한 연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줄기차게 지속된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미·일 삼국은 2014년에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약정(TISA; Trilateral Information-Sharing Agreement)’을 발효시켰고, 북핵의 고도화가 지속됨에 따라 한일 양국은 양자 간 GSOMIA를 재추진하게 되었다. 2016년 11월 23일 양국이 마침내 GSOMIA에 서명함에 따라 미국을 거쳐야만 한일 간의 정

보공유가 가능했던 TISA 체제의 한계를 넘어 한일 간 직접적인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GSOMIA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과는 격이 다르며, 상대국으로부터 받는 군사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전달·보관·관리·폐기하는 절차에 합의한 것으로서 II급 이하의 군사비밀만을 교환 대상으로 한다. 즉, 교환할 정보들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할 틀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은 미국을 위시한 33개국과 정부간 또는 국방부간 GSOMIA를 맺고 있으며, 대상국에는 러시아, 루마니아, 폴란드, 불가리아, 우즈베키스탄 등 과거 사회주의 불력에 속했던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성격의 GSOMIA를 두고 '제2의 을사늑약'이니 '일본의 한반도 군사개입 명분'이니 하는 것은 당치 않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크게 세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처함에 있어 일본의 우월한 기술정보와 한국이 유리점을 가진 지리정보 및 인간정보(humint)를 공유하거나 중복 정보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상호 보완하는 것은 양국 모두의 안보이익에 부합한다. 예를 들어, 7월 25일 한국의 조기경보레이더는 북한이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430km 비행 이후의 궤적을 추적하는데 실패했지만, 일본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600km인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GSOMIA가 작동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러시아가 유럽에 구축된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를 돌파하기 위해 만든 특수한 탄도미사일로서 정상적인 포물선 궤도가 아닌 '풀업(pull-up)' 기동을 통해 방어체계들을 교란·돌파하도록 제작되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제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상태라면 한국군의 종말단계 저고도 방어체계(PAC)는 물론 미군이 운용하는 종말단계 고고도 방어체계(THAAD)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이 기술정보력은 한국 안보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5기의 정찰위성, 1,000km 이상의 탐지 거리를 가진 4식의 지상감시레이더, 20여 대의 조기경보기, 80여 대의 해상초계기, 6척의 이지스함 등을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비해 한국은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조기경보기와 해상초계기의 숫자도 크게 못미친다. 지구가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한국의 그린파인 레이더나 이지스함에 탑재된 레이더는 1분 정도가 지난 후부터 탐지할 수 있지만, 우주에 배치된 일본의 정찰 위성들은 미사일이 구름층을 통과하는 순간 곧바로 탐지할 수 있다. 일본은 잠수함 정보와 감청능력(SIGINT)에 있어서도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은닉성과 침투성이 뛰어난 잠수함에 탑재되어 운용되는 탄도미사일(SLBM)은 비행거리와 방향을 예측할 수 없어 지상의 방어체계로는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데, 북한이 SLBM을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한다면 일본의 대잠수함 정보는 한국안보에 긴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둘째,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문제일뿐 아니라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과도 직접 연계되어 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벌이는 현 신냉전 구도 하에서 한국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동맹을 중심에 둔 상태에서 중국과도 최대한 비적대·우호관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Alliance + Hedging'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소미아의 파기에 대해 미국은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거부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불참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높으며, 이는 결국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동맹 중심’ 기조에서 탈피하여 노골적으로 ‘중국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 지소미아를 통해 교환해온 정보들이 한국 안보에 결정적인 것들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소미아 파기가 의미하는 상징성과 방향성은 막중한 의미를 가지며, 특히 향후에도 한국의 국가생존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 긴요한 한미동맹의 뿌리를 흔드는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다.

원활한 한·미·일 안보협력은 미국에게 있어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린치핀이기도 하지만, 유사시 한국의 안보에 직접 기여한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일본에 있는 일곱 개의 유엔사 후방기지는 한국에 전개되는 미군을 위한 중간기지로서 매우 긴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미군의 증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병력과 물자를 비축하여 출발시키는 중간기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 중간기지에서도 병력과 각종 전쟁장비와 물자를 분배하고 전투부대를 편성하여 한국에 보낼 수 있다.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는 이를 위한 최적의 위치라 할 수 있다. 한일 관계의 악화로 일본이 한국을 위한 후방기지 사용을 제약한다면, 미군이 한국에서 전쟁을 치루는데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볼 때 지소미아는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기여하는 장치이다. 현재 동북아에는 군사·경제적으로 급성장한 중국이 러시아 및 북한과의 결속을 강화하여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신냉전 구도가 정착 중이며, 중국은 대국굴기(大國崛起)와 강군굴기(強軍崛起)를 앞세우고 남중국해 및 동해의 내해화(內海化)를 시도하고 있다. 물론, 한중(韓中) 유대가 한미동맹을 대신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친중·탈미’ 기조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현 구도상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블록의 맹주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주된 위협인 북한의 군사동맹국으로서 한국을 도와 북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 또한, 중국은 팽창주의 대외기조를 고수하고 있는 신흥강대국으로서 주변국들에게 수직적 질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드(THAAD) 보복에서 보듯 특히 한반도에 대해서는 종주국 마인드를 앞세우고 일방적인 압박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런 시기에 한국이 생존과 번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공유하는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한일 간 안보협력에 기여하는 장치로서의 지소미아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했고, 이후 한미관계도 급랭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유감과 실망’을 표방하고 지소미아의 파기가 ‘주한미군을 위협하게 만들고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2일 이전에 한국 정부가 파기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서 미 국무부는 한국군의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시기와 메시지 그리고 규모가 비생산적이고 한일 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논평을 냈다. 미국이 한일 간 독도 분쟁에 개입하여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Liancourt Rocks)’로 호칭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8월 28일에는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한국정부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공개비판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한국의 차관급 공직자가 미국 대사를 초치하여 항

의성 요구를 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는 강대국과 상대적 약소국 간의 비대칭 동맹이 유지되는 이치와 한국안보의 현실을 무시한 경솔한 처사로서 워싱턴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다. 이렇듯 지소미아 파기와 함께 예상된 ‘동맹 파열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지만, 정부의 공위 공직자들은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 동맹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반복하고 있다.

이 와중에도 전작권 조기전환을 서두르는 정부

그럼에도 정부가 안보·외교의 역주행을 반전시킨다는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지소미아 건으로 동맹이 약화되고 안보가 고립되는 중에도 문재인 정부는 동맹 결속력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시작전권 체제를 조속히 해체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현 전작권 체제는 전쟁이 나면 한미군이 단일 지휘체제 하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 싸우도록 해놓은 체제이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1978년에 창설된 것이 한미연합사(CFC)이다. 즉,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이 극심한 시기에 닉슨 대통령과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고 독자 핵무장까지 협박(?)하여 받아낸 가장 확실한 대북억제 체제가 현 연합사 체제인 것이다. 당연히, 이 체제를 해체하는 것은 북한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전작권 조기 전환’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했고, 송영무·정경두 국방장관은 이에 저항하기 보다는 충실하게(?) 순응해왔다. 2018년 5월 송영무 장관은 ‘2023년 전작권 전환’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18년 10월 31일 제5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는 정경두 장관과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현 연합사를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을 그리고 미군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군사령부로 대체한다는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했다. 이후 정 장관은 주요 지휘관회의 때마다 ‘전작권 전환 철저준비’를 주문하면서 전작권 분리를 앞당기는데 충성심(?)을 보여왔다.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시도했을 때처럼 지금도 ‘전작권 환수’를 외치는 사람들은 ‘군사주권’과 ‘국가 자존심’을 들먹이면서 감성론으로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있으며, “국가 자존심은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국가생존이 먼저다”라는 이성론적인 주장에는 귀를 닫고 있다. 그럼에도, 냉정하게 따져보면 전작권 체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의 ‘이성적 설득력’은 전작권을 조기에 분리하자는 주장의 ‘감성적 설득력’을 압도한다. 북한은 한미군이 한 덩어리가 되어 싸우는 현 체제를 더 두려워하고, 미국이 책임을 공유하는 현 체제 하에서 전쟁 발발시 미군이 파병될 가능성이 더 높으며, 미군의 우수한 전투력과 정보력을 공유하면서 싸우는 현 체제 하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더 높기 때문이다.

또한, 현 전작권-연합사 체제에는 김성론자들이 제기하는 ‘군사주권 회복’이나 ‘국가 자존심’ 논쟁과 결부될 요인들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군통수권이라 함은 행정지휘권, 군수지휘권, 작전지휘권 등을 말하는데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한 이런 통수권은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사하며, 전쟁시에만 작전지휘권의 일부인 작전통제권(작전지휘권 중 작전명령에 명시된 특정 임무나 과업수행을 위해 특정 지휘관계를 설정하는 권한)을 연합사 체제로 편입하게 되어 있다. 또한 전시라 하더라도 한미 합참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일 동맹

의장, 한미 국방부장관, 한미 대통령이 연합사 사령관의 직속상관이 된다. 이는 현 전 작권 체제가 양국 대통령의 합의, 양국 국방장관 및 양국 합참의장이 합의한 지휘방 침에 따라 미측 연합사령관과 한측 부사령관이 공동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령관이 미군이기에 때문에 미군이 주도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연합사의 사령관과 부사령관은 일반 부대의 지휘관과 부지휘관은 상당히 다르다. 일 반 부대의 경우 부지휘관은 지휘관의 유고를 대비하는 직책으로서 결정권에 거의 개 입할 수 없지만, 연합사의 한국측 부사령관은 한국군을 대표하기 때문에 사령관과 부 사령관 간에는 협의와 합의라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 있다. 요컨대, 현 체제 는 ‘전시에 한미가 공동으로 작전권을 행사하되 미군이 주도권 더 많이 행사하는 체 제’라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군사주권을 박탈당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당치 않으며, ‘군사주권’을 빌미로 가장 효과적인 전쟁억제 체제로 만들어진 현 작전권-연합사 체제를 허물겠다는 것은 더욱 당치 않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작전권 조기 전환 방침은 불변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019년에 초기평가, 2020년에 중간평가 그리고 2021년에 최종평가를 거쳐 작전권 전 환을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을 진행중이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전문가들의 질문에는 침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작전권을 분리하더라도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연 합사를 대신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를 만든다고 한다면, 연합방위를 위한 최적의 체제 인 현 작전권-연합사를 그대로 두면 될 일이다. 그러면 굳이 현 체제를 허물면서 연 방방위태세는 유지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군 사령관을 맡는 문제도 그렇다. 이 경우 미군이 4성 장군이 부사령관으로 보낼 가능성 은 거의 없으며 중장이나 소장을 보낼 개연성이 크다. 최강국인 미국은 타국군 지휘 관 밑으로 자국의 전투병을 파병하여 전쟁을 수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군이 사령 관을 맡는 것은 곧 미군의 파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으며, 미군이 파 병된다 하더라도 중장이나 소장이 미측을 대변하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필요한 병력, 장비, 물자 등을 차출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런 냉정한 분석을 뒤 로 한 채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을 맡도록 합의했다는 것을 성과인양 내세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정부와 국방부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후일 역사는 문재인 정부의 작전권 조기 전환을 ‘군사주권 회복’이라는 포퓰리즘적 명분을 얻기 위해 실질 국가안보를 희생한 사례로 기록할 것이다.

냉정한 안보국익 계산 중심의 실용주의로 전환해야

한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래 취했거나 추진 중인 안보관련 정책들을 ‘자해적 (自害的)’인 것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이들 전문가들은 국정원 대공기 능 무력화, 군 기무사 해체·개편, 병력 감축, 예비사단 해체, 전방 초소 감축, 비무장 지대 지뢰 제거, 주적 개념 폐지, 한강 하구 개방, 북한군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9·19 군사합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축소, 연합사 해체 및 작전권 조기 전환, 지소미 아 파기 및 그로 인한 한미동맹 파열음 등을 목도하면서 ‘방향성’과 ‘일관성’ 측면에 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즉, 이들은 이런 조치들의 최대 피해자가 한국의 안보인 반 면 최대 수혜자가 평양정권과 김정은 위원장인 것으로 느끼며, 문재인 정부가 ‘민족공

지소미아 파기와 한미일 동맹

조'라는 이념적 목표를 향해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의 정책을 밀고나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보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통일' 등 불순한 동기를 가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라도 냉정한 안보국익을 중심적 가치로 삼는 실용주의 기조로 돌아와 당면과제로 부상한 동맹문제와 한일 갈등 문제를 다루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당연히, 스스로의 안보역량을 해치는 조치들을 중단하는 것이 기본이며, 군(軍)에 대해서도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정부가 남북 화해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중에도 군은 항재전장(恒在戰場)의 정신으로 나라의 테두리를 지켜내는 임무에 진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대일 정책에 있어서는 '과거사 및 영토 문제에 관한 다툼'과 '안보·경제 협력'을 분리 대응하는 성숙함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합작의 '평화경제'로 북한보다 경제력이 130배나 큰 경제·기술대국 일본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하자는 식의 포퓰리즘적 주장보다는 대화의 외교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경제관계를 회복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옳다. 한일 양국이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확산조치를 상호 자제하도록 선도하는 것이 이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동맹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 동맹의 역할이 여전히 막중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동맹의 파멸을 자초해온 '통북·친중·탈미·반일'이라는 좌파적 수정주의를 포기하고 실용주의적 기조로 선회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당연히, 지소미아 문제가 더 이상 동맹의 파탄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며, 북한의 숙원사업인 전작권 분리를 서두르는 일도 중단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한국이 스스로 애치슨 라인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경정해야 할 것이다.(끝)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

신 범 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I. 서언

동북아에 격랑이 일고 있다. 과거에는 일 년에 한 번씩 몇 년에 걸쳐 볼 수 있던 변화가 지난 몇 달 사이에 모두 등장했다. 미·중간 패권경쟁 하에서 미국의 공세적 접근이 전개되자 중·러의 협력과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며 중·러는 미국의 동맹 파트너인 한국에 대해 공세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참에 위상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태도 변화, 핵보유를 굳히려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동시다발적으로 맞물리며 동북아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문재인 정부 발 격랑도 크다. 강제징용 판결 이후 일본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결과 일본의 경제보복을 야기하더니, 급기야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제외를 명분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한 축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종료를 선택했다. 말이 종료지 파기나 다름없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미국이 이해했다고 주장하더니, 미국에서 우려와 실망이 제기되자 이제는 미국과도 대치국면을 이어갈 태세다. 주한미국 대사를 사실상 초치하여 미국의 반응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더니, 갑자기 주한미군 기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북한의 핵위협은 더욱 노골화 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침범이 잦아지는 데, 충구를 기존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인 미국과 일본에 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주변 정세의 안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해야 하는 한국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위기의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성을 지닌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의 방향성이 의심되는 시기다. 무엇을 위한 지소미아 종료이고, 무엇을 위한 한미간 갈등 증폭인가.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정책을 과감히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외교안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 글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을 살펴보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파급효과를 먼저 살펴본 후, 동북아 안보환경을 진단해보기로 한다. 이후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 요인들을 식별하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II.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의미와 종료의 파장¹⁾

지소미아의 의미

지소미아는 두 나라가 군사기밀을 주고받기 위한 법적 보장 장치로 서로 상대국으로부터 제공받은 군사기밀을 제3국 또는 제3자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협정이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커지자 이와 관련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협정을 2016년 11월 체결했다. 2011년에 체결여부로 한 차례 파동을 겪은 이후 5년 만에 다시 체결을 하게 된 것이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군사적인 위협과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함으로써 북한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한국이나 일본에 수분 안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를 먼저 탐지한 나라가 협정 상대국에 제공함으로써 방어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위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효율적으로 협조하기 목적도 존재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팽창에 따른 동아시아 전체에 다가올 위기에 한·미·일이 연대해 대처하려는 미국의 글로벌 안보전략에 참여하는 의미도 담고 있었다.

한·일 양국은 협정 체결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정보를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교류해왔다. 최근 북한이 9차례에 걸쳐 18발의 탄도미사일과 유도 방사포를 발사했을 때에도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2017년 발사한 ICBM은 일본 열도를 지나 태평양 상공에서 소실됐는데 한국이 보유한 레이더 탐지 거리 너머였다. 당시 일본은 ICBM의 탄두가 대기권에 고속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고열과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수km 상공에서 해체된 과정을 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중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우리 군의 그린파인 레이더 탐지거리 밖이어서 미사일의 최종 낙하에 따른 기술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거의 한국을 표적으로 하는 무기다. 일부에서는 동해로 가는 미사일의 최종단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나하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사전에 그 궤적과 비행의 최종단계를 파악해 놓아야 우리 쪽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에도 일본은 한국이 수집할 수 없는 북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동해안에 배치된 일본의 각종 정보수집 레이더, 조총련 커넥션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북한 정보 등이 있다. 또한 유사시에는 한국을 돕기 위해 증원되는 미군 병력과 물자 및 무기, 유엔군 등이 주일미군기지를 경유해 한반도에 투입된다. 따라서 지소미아에 근거해 일본이 신속하게 한국을 지원할 수 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그동안 한·일은 등가원칙에 따라 2급 이하 군사정보를 교환했다고 하는 데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하다는 점에서 한·일 지소미아의 의미를 무시할 수 없다.

한·일 GSOMIA 파기의 파장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일 관계는 협정 체결 이전으로 돌

1) 김민석, “한·일 GSOMIA 파기에 따른 파장과 전망.” 「김중로 의원실 세미나」(8.27.) 재구성.

아갈 것이다. 하지만 협정 종료의 충격으로 한·일관계는 훨씬 더 후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월 23일이 지나면 한·일간 군사관계는 사실상 단절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제 강제징용문제를 시작된 갈등이 『외교→경제→군사』로 확산된 상태다. 우리의 최대 위협인 북핵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데, 한·일 안보협력만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한·미·일 정보약정(티사, TISA)를 통해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티사는 미국을 통해서만 정보가 교환되기에 실시간 정보소통에 한계가 있고, 법적 효과가 없는 양해각서 수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소미아의 파장은 한·일관계를 넘어 한·미·일 안보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동맹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북핵 못지않게 중국 대응전략을 고심해 왔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왔다. 미국은 이런 차원에서 지소미아 체결을 독려했고, 그 결과 2016년 체결이 이루어졌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일 지소미아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시켜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한·일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큰 불신을 받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과 갈등이 생겨도 간접적인 외교적 수사로 표현했는데 이번엔 “실망,” “강한 우려,”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 등의 직설적인 표현이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등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밀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를 사실상 초치하여 미측에 항의한 내용을 대외적으로 밝힘으로써 상황을 확대하고, 미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주한미군 기지 문제를 공개적으로 꺼내며 강대강 대결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은 높아지고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압박하는 데, 한·일간 갈등을 빚더니 한미간 갈등도 감수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III. 동북아 환경 변화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²⁾

한·일관계의 악화

전통적으로 가깝고도 먼 이웃으로 불려온 일본과의 관계 악화는 한국의 외교안보에 커다란 도전을 가져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두 나라에 있어 역사문제는 협력의 장애가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기 공산권의 위협, 그리고 탈 냉전기 북한의 핵개발은 한·일간 안보협력의 동력을 제공했고 그간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켜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두 나라는 최근 들어 강제징용 문제를 기화로 경제전쟁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확정판결은 한·일 양국 관계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2) 최강, 신범철, “동북아 지각변동과 우리의 대응 방향,”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2019. 8. 27.) <http://www.asaninst.org/contents/category/publications/issue-briefs/> (2019. 8. 31 방문) 재구성.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일본 식민지배 당시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일본제철은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와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³⁾ 이후 판결의 이행을 둘러싸고 양국은 팽팽한 견해 대립을 이어왔다. 금년 상반기 일본은 한국 측에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외교적 교섭을 요구했고⁴⁾, 이를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경제제재를 가해오며 한·일 관계는 악화경로를 걷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반일감정이 거세지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이제는 일본이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교섭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8월 22일 한국 정부가 내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일관계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질 것을 시사한다. 일본은 당장은 한국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미국을 향해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해치고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미국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려는 행보를 취할 것이다. 이미 상황은 일본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한·일관계의 악화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약화로 이어진다. 이는 북한 위협에 대한 한국의 억제력 약화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한·일관계의 복원이 필요하며,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룬다 해도 일본의 대북 식민지배상 등을 적시에 활용하기 위한 한·일 협력은 필요하다. 따라서 악화된 한·일관계는 향후 북한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도 커다란 도전 요인이 아닐 수 없다.

한미동맹의 약화

미·중관계 악화나 중·러의 공세적 외교, 한·일관계 악화 등은 우리가 늘 목격해 왔던 일들이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약화는 그간 경험하지 못한 일이며, 한국의 안보와 관련한 많은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약화는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야기되고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 외교의 부작용에서 한미동맹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군사 훈련을 돈이 많이 드는 행사로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 과도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⁵⁾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주둔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봉사한다.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질서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연합군사훈련은 이러한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초투자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돈이 많이 드는 행사로 왜곡하며 그 가치를 평가절하 하고 있다. 이는 동맹국인 한국의 실망을 낳는 동시에 북한에게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비핵화를 하지 않고 버티기를 지속하다보면 한미동맹은 저절로 약화될 수 있다고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북한 중심적인 대외정책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주변부로 밀려나고

3)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배상 안하면 포스코 지분 압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082174> (2019. 8. 19. 방문)

4) 일본 외무성 한국과장 9일 비공개 항의 방문 했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368841> (2019. 8. 19. 방문)

5) Trump Says Talks with South Korea under Way over Defense Costs,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southkorea-defense/trump-says-talks-with-south-korea-under-way-over-defense-costs-idUSKCN1UX14V> (2019. 8. 19. 방문)

있다. 북한과의 관계 증진에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한미관계나 대북정책 공조에 악영향이 발생한 것이다. 그 첫 출발은 대북제재의 완화 문제였다. 작년 9.19 평양정상회담 이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국제사회의 반대에 직면했다.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뉴질랜드 등에서 대통령의 제안은 상대국 정상들에 의해 거부당했다.⁶⁾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내 신뢰가 훼손되었다. 방위비 분담 협상도 마찬가지다. 작년에 3년 이상의 장기계약으로 방위비 분담 협상을 마쳤어야 했다. 방위비 분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요구를 고려할 때 1년 단위의 협상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임을 고려할 때 잘못된 협상이 될 것임이 분명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1년 단위 협상을 수용하며 방위비 분담액의 급격한 상승 압박에 노출되었다. 아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한·미 양국 모두 국내정치적 요인이 동맹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제일주의에 근거한 과도한 방위비 압박이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우선 입장과 같이 동맹에 대한 배려보다는 국내정치적 성과를 더욱 중시한다. 특히 한국이나 미국 모두 동맹을 중시해오던 원로 정치인들이 은퇴한 후 중심을 잡아 줄 인물들이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가뜩이나 불안정한 한미관계의 유동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겉으로는 빛 썰 틈 없이 튼튼한 동맹이 속으로는 멍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에게는 최악의 외교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의 대외 환경 개선

한·일, 한미관계는 악화되고 있는데, 북한의 대외환경은 더욱 좋아지고 있다. 크게는 미중관계에서부터 작게는 북·중, 북·러 협력에 이르기 까지 북한에게 유리한 형국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은 북한에게만 도움이 되고 있다.

미·중관계가 악화되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공군훈련을 하는 도중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독도 영공을 두 차례나 침범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 미국에 대항하는 중·러의 공세적 대응이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인 한국의 영공 침범으로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이나 러시아의 행보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며, 미국에 대항하는 중·러의 협력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중·러간 군사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협정이 곧 체결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⁷⁾ 그 향배에 따라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갈 것이다.

미·중관계가 악화되고 중·러간의 협력이 강화되면 북한에게 외교적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지난 4월 전격적으로 성사된 푸틴 대통령과의 북·러 정상회담과, 지난 6월 전격적으로 추진된 시진핑 주석의 방북처럼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문제를 대미 외교

6) 文, '제재 완화' 필요성 거론...마크롱 "평화 프로세스 성공 지원," KBS NEW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52134&ref=A> (2019. 8. 18. 방문)

7) 러 군용기 韓영공 침범 논란 속 中매체 '중러 군사 우호' 강조,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5059200083?input=1195m> (2019. 8. 18. 방문)

의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려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전통적인 줄타기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실리를 최대한 확보하려 들 전망이고 이를 통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외교적 기반을 확충하려 들 것이다.

이와 별개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간 유대관계 강화도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 8월 16일 오후 베이징(北京)에서는 김수길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관 묘오화(苗華)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과 회담했다. 주의를 요하는 것은 동 회담에서 “최고 영도자 동지들의 숭고한 의도에 맞게 두 나라 군대들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이다.⁸⁾ 북·중동맹의 복원을 시사한 내용이다. 향후 우리에게 새로운 근심거리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지난 4월 25일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가졌다. 북·러 정상회담은 그리 성공적인 것은 아니었다. 북·러간 경제협력의 수준도 미미했고 핵문제에 있어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 준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북·러간 관계강화는 외교적 고립 탈피하는 관점에서 볼 때 북한에게 소기의 성과를 가져다주었다.⁹⁾ 과거 북·러관계는 북한 핵문제로 인해 경색국면이 이어져 왔는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도 양자관계가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논의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원형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임을 고려할 때 북·러간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경우 북한 비핵화 과정은 더욱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 해법이나 체제보장 문제에 있어 더욱 완고한 태도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중·러의 밀착 가능성은 북한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커다란 도전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위기와 복원 필요성

일반적인 한국의 인식과는 달리 미국이 생각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은 다목적이다. 미국의 경우 북한 위협 억제 못지않게 중국을 대상으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전개하고자 한다. 또한 한·미·일 자체로 끝나지 않고 호주,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그리고 인도에 이르는 동맹 및 우방국 네트워크를 연결하고자 한다.¹⁰⁾ 그렇기에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이 기주의적 행보, 아베 정부의 역사수정주의, 그리고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우선적 사고로 인해 한·미·일 협력에 위기 징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는 동맹네트워크 강화와는 반대의 움직임이다. 동맹국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미국 주도의 네트워크에 동맹국들의 기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 협력의 당사자인 한국이나 일본 모두 미

8) 북·중 軍수뇌부 베이징서 회담… 더 높은 단계로 친선협조 발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8005300504?input=1195m> (2019. 8. 18. 방문)

9) Kim Jong Un Asks Putin for Help with President Trump at North Korean Leader's Summit in Russia, Time, <https://time.com/5577927/kim-jong-un-vladimir-putin-russia/> (2019. 8. 19. 방문)

10) Indo-Pacific Strategy Report, The Department of Defense, 2019.

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받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유사하다. 그렇다보니 안보협력이 활성화되기 보다는 내부적인 갈등만 쌓이고 있다.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는 한·일간 협력의 장애물이다. 그 결과 아베 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순탄한 때는 한 번도 없다시피 되었다. 물론 한국의 대응이 매번 적절했던 것은 아니다. 의도적으로 아베 총리를 외면했던 시기가 있었고, 현 정부 들어 대법원의 강재징용 판결 이후 일본의 교섭 요청을 무시함으로써 상황이 악화된 측면도 존재한다. 역사문제만 빼고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을 공유하는 근접한 이웃 나라로서 관계가 나쁠 이유가 없는데, 여전히 남아 있는 역사문제에 대한 불편함이 양국 관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의 남북관계 우선주의 역시 한·미·일 안보협력의 장애로 등장하고 있다. 과거 한국은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왔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북한의 핵능력과 첨단 재래식 능력을 고려할 때 이미 한국 단독으로는 북한을 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며 다른 한편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온 것이다. 문제는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된 작년 이후 우리 정부는 북한의 거부감을 반영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미·일 안보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미·일 안보협력이 약화된 상황에서는 북한 핵위협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다. 강대국간의 경쟁이 거세질 경우 북한 핵문제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미·중·러 모두 서로간의 사활적 경쟁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며, 북한 핵문제는 관리 정도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북한은 이러한 정세를 적극 활용하며 핵보유를 고착화 하려 들 것이다. 자칫 미국이 이러한 북한의 핵보유 의도를 꺾지 못하고, 국내정치용 임시방편으로 일관한다면 지난 30년간의 비핵화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북한 핵문제가 주변 정세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역내 강대국의 입장차에 기인한다. 미국은 역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핵무기 및 기타 군사적 위협을 해결하려는 입장이다.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개발 자체를 달가워하진 않지만 미국의 역내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가진 것으로 파악한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성공한다면 궁극적으로 한미동맹과 미국의 한반도 주둔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경쟁 중인 중국으로서는 북한 카드를 적극 활용해 역내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 한다. 국제사회의 과도한 압박으로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거나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할 경우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만일 이를 우려한 중국이 북한을 품에 두고자 보이지 않는 지원을 한다면 비핵화 협상은 성공하기 어렵다. 북한은 중국의 지원을 배경으로 미국과 보다 지루한 협상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지쳐 양보를 하게 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물건너 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 의도를 차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효율적인 외교를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은 외교적 고립 속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의 복원은 우리에게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다.

IV. 결론

모든 정책은 정확한 상황을 직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만 올바른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국들의 동향과 우리에게 가해질 청구서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 상황을 북한이 어떻게 활용하려 들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현실을 외면한 장밋빛 미래 예측으로는 다가올 도전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복원하며,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미중관계의 악화에 따라 북한에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중이다. 비핵화 협상은 북한에게 있어 핵보유 협상으로 전환될 것이다. 자신들이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단계적 비핵화와 조기 제재 해제를 미국이 수용하면 협상을 하고, 미국이 거부하면 중·러의 지원을 받으며 버티기를 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궁극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한국이 북한을 설득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에 유리한 전략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다.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외교에서는 절대 해야 하는 일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없다. 우리 국익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하되 미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우리 나름의 대중, 대러, 대일 외교를 강화해서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서 주변국이 한국을 필요로 해야 한다. 그래야 노골적인 압박을 피할 수 있다. 동북아 군비경쟁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되 그 대열에서 이탈해서 홀로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핵을 보유한 북한의 전략적 위상을 고려하면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 군의 독자적 능력으로는 북한 핵무기를 당해낼 방법이 없기에 미국의 확장억제는 한국 안보의 불가결한 수단이 되어버렸다. 동시에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도 미국의 강력한 외교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불필요한 불협화음을 빚어서는 안 되며 철저한 한미공조를 통해 북한에게 단일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통해 철저한 북한 비핵화 공조를 해야 한다. 북한은 핵을 보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협박과 회유를 반복할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흔들려서도 평화공세에 넘어가서도 안 된다. 북한의 의도를 읽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면 된다. 선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자칫 후세에 핵위협을 물려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핵화 공조의 방향은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철저한 비핵화 원칙의 준수’가 되어야 한다. 비핵화가 어렵게 될 경우 억제력에 더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대로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것은 양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밝힌 것처럼 역사문제와 양국 협력의 두 트랙 접근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북한 문제에 관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강제징용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일 당국자간 접촉을 통해 한국의 기업과 일본의 기업이 출자하고, 한국 정부가 참여하는 방식의 '1+1+@' 방식의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이루어 내기 위해 미국을 먼저 설득하고 한미 공동의 목소리로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면 양국 모두 서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합의가 11월 23일 이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철회함으로써 한·미·일 안보협력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정책토론회

토론

■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韓·日 GSOMIA 연장 종료와 우리안보

신원식
前 합참 작전본부장

□ GSOMIA 연장 종료의 함의

○ 文 정권의 지향점이 분명히 공개된 사건

- 文 정권의 지향점?
 - 韓·美동맹 대신 민족 공조를 선택
 - 韓·美·日 자유 동맹 대신 北·中·러 전체주의 동맹을 선호
- GSOMIA 연장 종료 시기는 원래 계획된 수준?
 - 대법원 판결과 그 이후 文 정부 태도로 볼 때 원래 계획된 수준
 - 시기는 앞당겨졌을 가능성 높는데 그 이유는?
 - ① 김정은의 강력한 요구 ② 일본의 빠른 대응
 - ③ 국내정치적 곤경

○ GSOMIA 연장 종료의 종착점은 反美

- 일본보다 미국의 반발이 훨씬 강함

□ GSOMIA 연장 종료에 따른 각국의 이해와 입장

○ 한국에게는 치명적이나 文 정권은 이익이 크다고 인식

- 한국 입장 : 北核 대응 취약, 안보 핵심 Plafform & System 균열
- 文 정권 입장 : 단기 總選, 중장기 聯邦制(平和經濟로 용어 혼란)
 - * 조국 사태 관심 전환, 남북 평화 쇼(Again 2018)
- ★ 대한민국과 文 정권의 이해 셈법이 극명하게 상이

○ 미국은 명확하게 반대하나 대응은 고심

- 왜 반대? : 한국 이탈은 인도·태평양 전략 추동력 저하, 수정 불가피
- 한국을 포기 or 복귀 유도(강제)? : 일단 11.23일 시한 제시
- 포기 : 전략 수정(일본 : linchpin + cornerstone),
 - 美 Global Leadership 유지 차원에서 한국 강력 응징 불가피
- 복귀 유도 : 소리 안 나고 효과 큰 수단 먼저 사용 → 자발적 복귀
 - 美 요구 수용(韓·美·日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방위비 인상 등)

- 일본은 관망하며 미국지지
- 北은 복귀 극렬 반대, 복귀 시 고강도 대남 위협 및 대결 구도 압박
- 中·러는 복귀 반대하되, 공개적으론 관망 자세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국익 도외시한 내수용 반일(反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이명박정부 시절 미국의 요청에 의해 추진 됐지만, 당시 GSOMIA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조건적인 정부 흔들기가 더해진 국민반발로 인해 좌초됐다. 그 여파로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정책을 총괄하던 김태효 대외정책기획관이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박근혜 정부 내내 미국의 요청이 이어졌었고, 박근혜 前대통령 탄핵소추안 헌법재판소 가결 직전인 2016년11월24일에 전격적으로 체결됐다.

많은 이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본과의 상호 교류가 주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기능적으로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인 대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이다. 그 중 중국의 각종 탄도미사일에 대한 MD는 대중국 군사전략의 베이스다. MD가 완성되지 않고 중국을 압박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미국의 21세기 세계전략은 인도·태평양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가 MD인데,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의 정보 네트워크가 필수다. 그 일환이 바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따라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다는 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훼손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그만 둘 수도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정부는 동맹보다 국익이 우선이라는 알팍한 언어구사로 지지자들을 현혹시킨다. 대한민국의 국익에 한미동맹보다 더 강한 국익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미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연일 한국의 조치를 비난하고 우려하는 논평들이 쏟아지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예정됐던 각종 국내행사에 불참하는 것으로 그를 초치한 외교부의 행동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외교부 차관이 미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을 지낸 장관급 대사인 해리 해리스 대사를 초치한 것을 두고 친정부 성향의 지지자들은 강대국이 된 것 같이라며 환호하고 있다. 일본에게 당당한 것을 두고도 역시 마찬가지로의 반응이다. 이런 무지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지지도 유지에 활용하는 이 정부는 국가 리더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이 쇼의 대가로 한미동맹은 거의 파탄지경에 다다르고 있음을 정부와 그 지지자들은 인식해야 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오롯이 미국에게만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전력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 자산이 한·미·일 3국 중 가장 많다. 8개의 정찰위성과 22대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19개의 감청기지, 8척의 BMD¹¹⁾ 이지스

11) 탄도탄 요격능력

함을 보유하고 있다. 또 EP-3를 비롯한 15대의 대형 신호정보수집¹²⁾ 정찰기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지상배치 탄도탄 추적레이더 2개소와 해상에는 탄도탄을 탐지만 할 수 있는 이지스함 4척에 불과하다. 신호정보수집정찰기의 수준은 ‘린다김’ 사건으로 잘 알려진 소형기체인 호커800 베이스의 ‘백두’정찰기와 2017년11월에 도입된 중형기체인 팰컨2000S를 베이스로 한 2대의 신형 백두정찰기가 있다. 기존 백두정찰기는 기체가 소형이다보니 많은 장비를 탑재할 수 없고 체공시간도 짧아 제대로 된 신호정보수집이 힘들다.

이런 정보자산의 열세 속에 북한의 탄도탄 위협에 가장 많은 위협을 받는 대한민국이 더 많은 정보를 신뢰의 바탕 속에 교류 할 수 있는 자산을 거부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북한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다음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과의 정보교류 건수를 흘리며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 별로 손해 볼 것이 없다고 말한다. 이는 마치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 군대 필요 없다는 말과 같다. 오직 실전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조직과 제도를 실전 상황이 아닌 평시에 큰 교류가 없었다고 평가절하 하는 이 정부의 앞박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다.

이렇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대한민국의 군사적 생존이 걸린 문제이며, 한미동맹을 위협하게 만들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적 생존까지도 심각한 위협에 빠트릴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런 국가적 핵심 사안을 국내정치에서 지지자들의 결집을 유도하는 소재로 사용하는 문재인정부는 후세들의 평가가 두렵지 않은가. 문재인 정부는 부디 그들의 지지자만의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로 돌아오길 촉구한다.

12) 통신감청과 각종 전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기능



• 시장경제외민주주의연구소